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체계

송연이¹⁾ · 김희결²⁾ · 이꽃매³⁾ · 정혜선⁴⁾ · 김현리⁵⁾ · 김용규⁶⁾ · 현혜진⁷⁾ · 김정희⁸⁾ · 남소정⁹⁾

문경대학 간호과¹⁾ · 경원대학 간호과²⁾ · 상지대학교 간호학과³⁾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보건대학원⁴⁾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⁵⁾ ·

가톨릭대학교 산업의학센터⁶⁾ · 강원대학교 간호학과⁷⁾ · 제주대학교 간호학과⁸⁾ · PEG⁹⁾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현황 파악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분야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보건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정부 및 민간의 지원기관 및 지원체계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민간기관의 지원현황을 파악한 후, 관련단체를 통해 타 기관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본 연구원이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를 면담하고 조사를 시행하였다. 관련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전화면담을 시행하여 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고 기관의 역할을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의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반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관련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매월 본 연구진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문헌조사결과, 기초조사결과, 질적 연구수행결과, 현지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 지원체계 마련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본 연구진이 분석한 지원방안과 관리체계에 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산업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전문가, 근로복지공단,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 산업보건관련기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의 관련자가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3. 연구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보건을 위한 지원기관은 대부분 민간기관이 주도하여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과 관련한 정부관련 기관으로는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이 있는데,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기관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지원체계의 활용방안은 3단계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민간지원기관의 활용이다.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외국인 근로자 특히 불법체류자인 경우와 사업주는 정부기관 주도의 서비스 참여를 꺼리게 되므로, 접근이 좀 더 용이한 민간 지원기관을 통해 지원을 의뢰한다.

2단계는 민간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이다. 민간 외국인 근로자 지원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민간기관 등록제를 실시하며, 정부기관을 통한 민간기관 실무자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지원기관에 교육전담팀을 두어 교육대행 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에 산업안전교육원, 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와 지도원 등은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강사를 파견하고 교재를 공급한다. 또한 산업보건 관련 지원 및 감시체계 제고를 통한 유연성을 강화 한다. 효율적 의사소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언어 및 문화교육을 실시한다.

3단계는 중앙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시도한다. 중앙기관에서는 지역본부와 지도원으로부터 추천된 민간지원기관에 대해 승인하고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한다. 중앙기관에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부서를 두어 언어 및 문화교육과 안전, 보건과 관련된 교육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며, 강사를 양성한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관간의 온라인 네트워킹을 구축하며, 외국인 근로자 응급전화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자국어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상담원은 전국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도록 하며,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관련기관을 연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찾고 자주 이용하는 민간지원 기관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기관에 대해 정부에서 보다 많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지원기관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및 대부분의 인력이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안전보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므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교육원에 외국인 근로자 실무담당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관간의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지원기관들이 개발한 도구 및 프로그램들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기관간의 네트워킹을 신속히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교육 및 국가별 언어에 맞는 교육교재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부기관에서 중심이 되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언어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다양한 예방업무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내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시간의 제약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및 상담 창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